정동영, 임동원, 박재규 전 통일부 장관이 28일 개성공단을 방문, (주)삼덕통상에서 북측 근로자와 함께 직접 신발을 만들어 보고 있다. /연합뉴스

■ 북 '김정일, 부시 친서·특사 방북 희망' 의미는?

북미관계 일괄타결 타진

김 위원장 '빅 딜' 직접 나선 듯… 클린턴 시절 상황과 닮은꼴

북한 김정일 위원장은 북미관계 일괄타결을 희망하는 걸까.

김 위원장이 이달 초 미국을 방문한 김계관 외무성 부상을 통해 조지 부시 대통령의 친서를 강력히 희망한 사실이 공식 확인되면서 궁극적 목표인 북미수교를 핵폐기와 '빅 딜'하기 위한 의사타진에 나선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김부상의 뉴욕 발언 요지=김 부상이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회담 참석차 이달초 샌프란시스코와 뉴욕을 차례로 방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등 미 고위관리들에게 밝힌 김 위원장의 메시지는 크게 두가지였다고 한다.

복수의 정통한 고위당국자들 전언에 따르면 하나는 김 위원장이 부시 대통령과 친서 교환을 원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부시 대통령에게 '고위급 특사'(high-level envoy)를 평양에 파견해 줄 것을 강력히 희망한다는 것이다.

◇北, 부시 친서 원하는 이유=미국의 정통한 소식통들은 김 부상이 이번 뉴욕 방문때 수차례 "미국의 대북 메시지가 혼란스럽다는 뜻을 밝혔다"고 확인했다.

힐 차관보가 자신들에게 귀띔한 대로라면 핵폐기만 하면 원하는 것을 모두 줄 수 있다는 것인데, 실제 백악관 등 미 수뇌부 기류는 반드시 그런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05년 9·19 공동성명 발표를 앞두고 재무부가 느닷없이 BDA 계좌 동결조치를 발표한 것을 비롯, 북미관계정상화 실무회담을 앞두고 유엔개발계획(UNDP)이 대북사업 중단을 전격 발표한 것을 보면 아직 미국을 완전히 신뢰하기 어렵다는게 김 부상의 주장이었다고 한다.

게다가 최근 BDA 송금 문제를 이유로 제6차 6자회담을 보이콧한 것도 이런 분위기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관측이 유력하다.

◇北, 대북특사 요구 배경과 전망=김 위원장은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을 포함한 북핵폐기 문제, 대북 체제보장 등 쟁점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선 고위급 인사의 평양 방문이 절실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게 관계자들의 일치된 전언이다.

그러나 미국의 분위기는 현재로선 시기상조라는 견해와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으로 나뉜다. 실제 파견 여부와 상관없이 북한은 아버지 부시 전 대통령과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존 네그로폰테 국무부(副) 장관 중 한명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설이 파다하다. 하지만 여러 정황을 감안할 때 북한은 라이스를 지목하고 있다는 관측이 유력하다.

◇5월 초 6자외무회담→5월 중순 힐 방북→6월 라이스 방북(?)=김 부상은 이번 뉴욕 방문기간에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의 방북 사례를 여러번 거론했다고 한다.

올브라이트가 전격 평양을 방문, 김 위원장과 회담함으로써 북미 관계정상화 논의의 극적인 계기를 마련했던 것처럼 라이스의 방북을 통해 다시 한번 북미수교 협의의 물꼬를 터보려는 게 아니냐는 얘기다.

물론 4월 말이나 5월 초로 예상되는 6개국 외무장관회담 이후 힐에 이어 라이스가 방북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돌고 있지만 이는 부시 대통령의 결단을 요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예단하기 쉽지 않다. /연합뉴스

정동영 "개성서 남북정상회담 열자"

열린우리당 정동영 전 의장은 28일 "오늘 개성공단 방문 때 남북정상회담을 개성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남북 양측에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개성공단 방문에 앞서 이같이 말하고 "개성은 정치적, 경제적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남북정상회담을 열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밝혔다.

그는 "개성은 6·25 이전에는 남측 땅이었다가 이후 북측 땅이 됐고, 개성공단이 있는 만큼 남북경제협력 추진 의지도 과시할 수 있다"면서 "(남북 정상이) 개성을 당일 방문한 뒤 귀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무적 준비를 대폭 간소화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남북정상회담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평화체제 문제에 관해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을 쳐다보고 있겠느냐. 우리 운명이 걸린 문제는 우리가 운전대를 잡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핵과 남북정상회담 문제를 연동해 핵 문제가 풀려야 정상회담이 가능하다는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북미 양측 사이에는 아직 신뢰가 없는 만큼 이런 때 한국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이 남북정상회담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남북정상회담은 1차적으로 올해 상반기 중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8월까지는 개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각당의 대선후보가 선출되기 전까지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전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 프로그램에 출연, 범여권 충청권 의원들이 정운찬 전 서울대총장의 대선출마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데 대해 "정 전 총장이 나름대로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적절한 시기에 의사표시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보·혁 갈등 격화…'친북 배후론'까지

한나라 대북정책 수정 당 안팎서 골치

한나라당이 대북정책 기조수정 문제를 놓고 당안팎으로 골치를 썩고 있다.

북미관계 정상화 움직임 등 한반도 평화무드에 맞춰 그 간의 대북강경기조를 대폭 수정키로 방침을 정했지만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당이 주요 대북이슈에 대해 오락가락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범여권으로부터 "위장전술" 등의 각종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것.

여기에다 아직 소수의견이긴 하지만 당내에서도 급격한 대북정책 변경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계속 나오면서 정체성 논란에도 휩싸이는 모습이다.

우선 점점 현실화되는 듯한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이 애매모호하다. 한동안 찬성 불가피론 쪽에 무게를 싣고 비난의 강도를 낮추는 듯하더니 최근에는 다시 예전의 강경기조로 돌아가 맹공을 퍼붓는 분위기다.

북미관계가 급속히 진전되던 무렵인 이달 중순께 김형오 원내대표는 "핵불능화까지 가는 데는 1년 정도 걸리는데 그렇다고 1년 후에나 정상회담을 하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며 현 정권 임기 내 남북정상회담도 수용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그러나 유기준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 "이해찬 전 총리가 조만간 2차 방북을 한다는데 남북정상회담 준비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점의 정상회담은 북한에 끌려가는 회담이 될 뿐이다. 정략적 남북정상회담에 반대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원들의 방북활동에 대해서도 정확한 자세가 뭔지 헷갈린다. 심지어 이중적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전시작전통제권(작통권) 환수에 대한 입장도 아리송하다. "북핵문제가 해결되면 작통권 문제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가 "그런 것 아니다. 결정된 바 없다"며 시급히 진화에 나섰다.

당내 정체성 논란도 간단치 않다. 대표적 강경보수파인 김용갑 의원이 전날 개인성명을 통해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과 좌파세력의 홍위병 역할까지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특정 대선주자 측이 친북좌파정책을 주도하고 있다"고 맹비난하자 즉각 친북정책 주도의 '배후'로 지목받은 이명박 전 서울시장측이 발끈하고 나선 데 이어 이날은 지도부까지 논란에 가세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현장과 시각

정태석 행장에 거는 기대

장필수

경제부 차장

광주은행의 정태석호(號)가 재 출범했다. 지난 26일 열린 광주은행 주주총회에서 재선임된 정행장은 임기 3년의 은행장직을 수행하게 됐다.

정 행장은 28일 취임 기자회견을 갖고 평소 자신의 지론인 '강소은행(强小銀行) 론'을 폈다. 자원도 없고 인구도 적은 스위스가 신뢰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강소국가가 된 것처럼 광주은행도 작지만 강한 은행으로 거듭나자는 것이다. 전국을 기반으로 한 시중은행은 물론 시장개방으로 외국계 투자은행과도 무한경쟁을 펼쳐야 하는 지방은행으로서는 생존을 위한 틈새전략인 셈이다.

지난 3년동안 정 행장이 이끄는 광주은행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냈다. 취임전 8조8천억원에 불과한 자산을 14조원으로 늘리고 광주은행의 시장가치도 1조2천~1조3천억원으로 키우는 등 성장성과 수익성, 경영 안전성 측면에서 모두 성과를 냈다.

정 행장이 연임에 성공한데는 이런 성과가 작용한 것이 사실이다. 대주주인 정부측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광주은행의 자력기반을 닦은 정 행장의 역량을 인정한 셈이다.

하지만 본 게임은 지금부터다. 금융계에서는 광주은행이 앞으로 3년동안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은행이 지난 3년간 올린 성과는 정 행장의 탁월한 경영능력이 가장 큰 원동력이지만 은행업계 전반에 걸친 우호적인 환경도 한 몫했다는 이유에서다. 정 행장도 기자회견장에서 인정했듯이 다가올 3년은 한미FTA로 인한 금융시장 완전개방,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등 금융환경 변화가 훨씬 심해 지방은행으로서 경쟁력 확보가 쉽지 않다.

더구나 내년 3월까지 어떤 형태로든 민영화를 마쳐야 한다는 광주은행만의 구조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민영화 문제는 최대주주인 우리금융지주와 연계돼 있어 자회사의 CEO 입장에서 '쾌도난마(快刀亂麻)'식의 방안을 내놓을 수는 없지만 '지역은행은 지역민의 손에'라는 기치를 내걸고 인수를 추진중인 지역 상공인들과 현실적 문제를 놓고 어떻게든 담판을 지어야 한다.

정 행장은 사석에서 "광주은행장으로서 가장 힘들었던 일을 광주은행 주식으로 피해를 본 지역민들을 만날 때"라고 말해 왔다. 지역민들이 광주은행으로 인해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겠다는 의미일 것이다.

정 행장이 추구하는 강소은행은 이런 아픔을 잊지않는데서 출발하는 것이 아닐까. 2010년 진정한 강소은행으로 태어난 광주은행을 기대해 본다.

/bungy@kwangju.co.kr